



[산업] 현대·기아차 운전석 오른쪽도 안전 차세대 에어백 개발 08



Life

[라이프] 혼수·이사 큰손 잡아라 유통가 대목 겨냥 '세일 大戰' 1



한강 위 외딴섬 노들섬, 음악과 숲 어우러진 '문화섬'으로

용산-노량진 잇는 문화공간 조성 라이브하우스 등 전문 공연장 소규모 기획사 입주공간 마련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대교 아래 방치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 노들섬이 음악섬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다리 밑 노들섬을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28일 정식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시설을 품은 인공섬이라는 점에서 '세빛둥둥섬'을 떠오르게 한다.

세빛섬은 서울시가 2011년 총 139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조성했지만 환경 파괴와 낮은 접근성,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 2013년 건축전문잡지 SPACE에서 '한국 최악의 현대건축'을 주제로 건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4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 재단장한 노들섬이 오는 28일 정식 개장한다. 사진은 63빌딩에서 바라본 노들섬. /연합뉴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에서 2004년 노들섬을 매입한 후 한강예술섬 건립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 소요, 과대한 설계 등 여러 반대에 부딪히며 2012년 사업이 최종 보류됐다"며 "이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노들섬 포럼을 구성해 설계와 운영계획

등을 확정, 운영자 맞춤형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들섬의 핵심시설은 한강대교에서 용산 쪽을 바라보고 다리 서편에 들어선 '음악 복합문화공간'(연면적 9747㎡)이다. 한강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대 3층 높이의 건축물을 다

양한 층위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음악 복합문화공간은 ▲라이브하우스(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노들서가(서점 겸 도서관) ▲엔테이블(음식문화공간) ▲식물도(島)(식물공방)로 구성됐다. 이외에 소규모 음악·문화 기획사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입주공간 노들오피스, 뮤직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라이브하우스는 기본 456석(스탠딩 874석) 규모로 콘서트에 최적화된 음향과 조명, 악기시설, 리허설 스튜디오를 갖췄다. 노들서가에서는 15개 독립 서점과 출판사가 계절별로 직접 기획한 책을 선보인다.

한강대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3000㎡ 너비의 잔디밭 '노들마당'이 펼쳐진다. 피크닉 장소와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강대교 동편은 한달 후인 10월 20일 문을 연다. 강의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들어선다. 나머지 공간은 기존 노들섬의 자연 생태를 보존한 '노들숲'이 된다.

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맹꽁이 3500마리 성체를 온전하게 섬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기 위해 이주지를 만들었고 섬이 40년동안 방치되면서 외래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그 자리에 두려고 했다"고 말했다.

노들섬 내 주차는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에 15개 버스 노선이 지나고 1970여대의 버스가 오간다"며 "섬이 장기간 방치돼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뿐 실제 접근성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들섬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자를 우선 선정, 기획·설계·시설조성 후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특히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뮤지션들의 특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창동, 新경제중심지로... 대규모 산업단지 착공

최고 49층 규모 창업·문화산업단지 플랫폼 창동61·서울아레나 등과 연계

오는 2023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동북권 일자리·문화산업 거점인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가칭)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도봉구 창동 1-28 부지에서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하 7층~지상 16층 문화창업시설과 지하 7층~최고 49층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두 건물은 서로 연결된 형태로 지어지며 연면적 14만 3551㎡ 규모다. 지하철 1·4호선과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창업시설에는 창업·교육·전시·마케팅이 이뤄지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공간(2500명 수용)과 문화 관련 사무실 약 300개가 조성된다.

오피스텔에는 창업창작레지던스 공

서울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2023년 5월 완공 예정



간 792실과 문화집객시설(서점·문화집회시설·상업시설), 주차장 등이 만들어진다. 지상 6~49층에 마련될 창업창작

레지던스 공간은 사회초년생, 1인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 등이 거주하며 창업·창작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산업단지 건물 저층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지하 판매시설은 추후 조성할 복합환승센터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주변 시설과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복합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서울아레나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영업인가를 받은 '서울 창동 창업문화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서울창동도시재생리츠)가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민간용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2019 DMZ 페스타' 개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1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DMZ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각 주제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가 'DMZ, 생태, 평화, 관광 4개의 주제관을 조성해 DMZ의 모든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경기도, 건설업 폐이퍼컴퍼니 무더기 적발

'회사 쪼개기' 등 불법 업체 현장단속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 TF팀'을 신설 지난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폐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

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능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ey@

서울시, 기업·대학 등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미래교통 기술 개발 지원 업무협약

서울시는 18일 자율주행 관련 국내 25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24시간 무

료로 개방해 미래교통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용 지침'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을 보유한 19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 기관들은 상암 자율주행 테

스트베드 내 관제센터, 연구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주행차 동차법'에 따라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